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진행

- 2023년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11.1.)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의료혁신 전략(이하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혁신전략」의 핵심 과제인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을 10월 26일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대학별 교육역량과 증원 수요의 조사·검증을 추진하며, 의사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보정심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과의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과 의사인력 확충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앞으로 전문위원회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의료혁신 전략(이하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1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10월 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혁신전략」의 핵심 과제인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을 10월 26일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대학별 교육역량 및 증원 수요조사와 증원수요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며, 지역 간 배분 및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대한 신속히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다양한 의료계 단체와의 간담회와 지역의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정심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과의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논의 경과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과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8.16.)」에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두 전문위원회는 모두 8월 31일(목)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필수지역의료 현장 전문가와 의료 수요자와의 토론을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필수지역의료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법적분쟁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료 보상강화 등을 검토 중이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의과대학 입학교육 ▲전공의 배정·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료, 해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전문위원회 논의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420)
		담당자	서기관 장태영 (044-202-2404)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수의료지원관 의료보장혁신과	책임자	과 장 강 준 (044-202-2680)
		담당자	사무관 임희주 (044-202-2681)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양수 (044-202-2430)
		담당자	사무관 진상인 (044-202-2431)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420)
		담당자	서기관 장태영 (044-202-2404)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양수 (044-202-2430)
		담당자	사무관 진상인 (044-202-2431)

1 위원회 성격·기능

- (성격)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의 심의 기구

*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기능) ① 보건의료발전계획 ② 주요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의 개선 ③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심의

2 위원 구성

- (구성) 위원장(장관) 1인을 포함 25인

- 정부위원 7인(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환경부·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 민간위원 17인(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 (임기) 2023. 8. 10. ~ 2025. 8. 9. (2년, 연임가능)

위원	소속 및 직위	성명	위원	소속 및 직위	성명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민간위원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정부위원 (7)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병환		공급자 대표 (6)	대한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교육부 차관	장상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조성경			대한한 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대한약사회 회장	최광훈
	환경부 차관	임상준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영경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			전문가 (5)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한양대학교 교수		박현경
민간위원 수요자 대표 (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원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현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임재준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이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성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김진아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	김명호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강석구				